Ⅱ 초위험사회와 포용보험의 이론적·규범적 논의

1. 초위험사회의 도래와 리스크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수리적 예측 가능성의 임계점을 돌파한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로 진입했다. 일찍이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통계적 계산과 사후적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인위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위험사회'로 규정하며, 현대의 거대위험은 민간보험시장의 전면적인 인수 불능(Uninsurability)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1] 오늘날 마주한 초위험사회는 벡이 주장한 것처럼 개별적 거대 재난의 차원을 넘어선다. 기후변화, 초고령화,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 등 이질적인 거시위험 인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이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식의 '계산 가능한 리스크(Risk)'의 범주를 무력화하고, 확률조차 측정할 수 없는 '진정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상업보험의 배제 논리가 작동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적 영역으로까지 보장 공백(Protection Gap)이 확산되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가. 다중위기와 초위험사회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중위기(Poly-crisis) 현상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한다. 다중위기라는 용어는 1990년대 프랑스의 복잡계 철학자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이 처음 주창했으며,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 사학자인 컬럼비아대학교의 애덤 투즈(Adam Tooze) 교수에 의해 현대사회의 위험구조를 설명하는 핵

1)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의 거대 위험(원전, 환경 파괴, 전염병 등)이 과거 산업사회의 위험과 달리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피해 규모의 무한성, 시공간의 초월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음. 그는 이러한 위험들이 민간보험 제도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과 '사후 보상 가능성'을 무력화시켜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의 한계(인수 불능, Versicherungsunfähigkeit)'를 초래한다고 분석했음. 벡에게 있어 보험 제도의 파산은 곧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적 안전 계약(Security Compact)의 종말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Ulrich Beck(1986)(국내 번역본: 홍성태 역(2006)), 제1장 및 제2장 참조바람

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2] 투즈 교수는 다중위기를 "다양한 충격들이 상호작용하여 그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파괴력이 개별 충격의 단순 합을 훨씬 초과하는 비선형적 위기 상황"으로 정의한다.[3]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진단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Global Risks Report 2023"을 통해 현대의 글로벌 리스크 환경을 다중위기로 공식 명명하며, 이를 "서로 연관된 글로벌 리스크들의 군집(Cluster)으로서 복합적 영향력이 개별 리스크를 압도하는 현상"이라 규정하였다. 과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로 경제 및 금융 시스템 내부에 국한된 단선적(Linear) 충격이었다면, 현재의 다중위기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적 한계', 초고령화 및 긱 경제(Gig Economy) 확산에 따른 '사회·구조적 기반 약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압박' 등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성격을 지닌다.

다중위기의 전개 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위험 요인 간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와 이로 인한 '동조화(Synchronization)' 현상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물리적 위험)는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식량 생산량 급감과 공급망 교란을 유발하며, 이는 즉각적인 생계비 위기(경제적 위험)와 사회적 갈등(지정학적 위험)으로 전이된다. 개별 위험들이 서로의 촉매제가 되어 임계점(Tipping Point)을 돌파하게 만드는 이 상호작용은, 결국 통제 가능한 위험을 범사회적인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로 변모시킨다.

결과적으로 다중위기의 도래는 사회와 경제시스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소진시키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복합 충격이 일상화되는 초위험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국가 복지제도나 단일 금융상품 중심의 안전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

2) 프랑스의 복잡계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은 안-브리지트 케른(Anne-Brigitte Kern)과의 1993년 공동 저서 『Terre-Patrie』에서 '다중위기(Polycrise)'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했음. 국내에는 불어 원전 출간 직후인 1993년 12월, 『지구는 우리의 조국』(이재형 역, 문예출판사)이라는 표제로 번역 출판되었음. 모랭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단일한 차원(지구온난화, 핵위험 등)으로 분절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연쇄적인 결합을 통해 문명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았음. 그의 복잡성 철학(Complexity Theory)은 현대 다중위기 담론의 구조적·학술적 모태가 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Edgar Morin and Anne-Brigitte Kern(1993)(국내 번역본: 이재형 역(1993)) 참조바람

3) 거시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Adam Tooze)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구적 혼란을 진단하며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켰음. 투즈 교수는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하에서는 하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개입이 오히려 다른 영역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유발한다고 지적함.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3(Global Risks Report 2023)』의 메인 프레임워크로 채택되며 현대 거시 리스크관리의 핵심 패러다임이 되었음. 관련 논의는 Adam Tooze(2022) 및 세계경제포럼(WEF) 공식 리포트 참조바람

다. 이는 리스크관리의 주체인 보험산업에 전례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맹아가 되고 있다.

〈표 Ⅱ-1〉 전통적 위기와 다중위기의 특성 비교

구분	전통적 위기	다중위기
발생 원인·양상	단일요인 중심, 선형적 인과관계	이질적 복수요인의 동시다발적 결합
파급범위	특정 국가, 지역 또는 단일 산업	전지구적, 사회·경제·생태계 전반
예측 및 통제	과거 통계치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가능	상호작용에 의한 비선형적 증폭으로 예측 및 사전 통제 불능
피해의 성격	일시적 충격 발생 후 일정기간 내 회복 (V자 혹은 U자 반등)	만성적 피해 누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고착화(L자 침체)
대응 주체	개별국가의 단일부처 (중앙은행, 금융감독 당국 등)	범국가적 공조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자료: WEF(2023), Adam Tooze(2022)의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나. 핵심 위험 인자의 현황과 상호작용 메커니즘

다중위기를 구성하는 개별 리스크 인자들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위협은 이들이 맺고 있는 촘촘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Report 2024"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상위 위험 요인으로 기상이변(Extreme Weather), 인구구조의 변화(Demographic Shifts), 생계비 위기(Cost-of-living Crisis), 그리고 노동시장 재편(비자발적 이주 및 플랫폼 경제 확산)을 지목하였다. 현대 초위험사회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핵심 인자의 현황과 상호연결망(Interconnections)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물리적 충격의 가장 강력한 시발점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생태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경제적 리스크다. 스위스 리(Swiss Re) 산하 연구소(Sigma)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800억 달러에 달했으며,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의 빈도는 과거 50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4] 이러한 물리적 타격은 식량 공급망 교란 및 인프라 파괴로 직결된다.

4) Swiss Re Institute(2024), pp. 4~12;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액

둘째, 초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위험 흡수 능력(Buffer capacity)을 구조적으로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의 급증을 동반한다. 고령층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만성질환 및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된 보건·의료 리스크의 폭발적 증가를 낳으며, 이는 공공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에 만성적인 압박을 가한다.

셋째, 플랫폼 노동(긱 경제)의 확산과 생계비 위기는 경제적 취약성을 극대화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기반의 비정형 노동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얻은 대신 전통적인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체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경고한다.[5] 불안정한 소득구조 속에서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는 이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인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위험의 상호 전이(Risk Contagion) 메커니즘'을 통해 폭발적으로 결합한다. 예컨대 여름철 극단적인 폭염(기후 리스크)이 발생할 경우, 옥외 배달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즉각적인 소득단절(생계비 위기)을 겪게 된다. 동시에 이 폭염은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및 유병자들의 온열질환과 급성 쇼크(보건 리스크)를 유발하여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킨다. 플랫폼노동자나 저소득 고령층은 축적된 자산이나 상업보험 등 경제적 방어막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므로, 단 한 번의 복합 충격(폭염+소득단절+의료비 발생)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한 것처럼 "위험은 민주적이지 않으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실제로 OECD(2020a)의 연구[6]에 따르면, 동일한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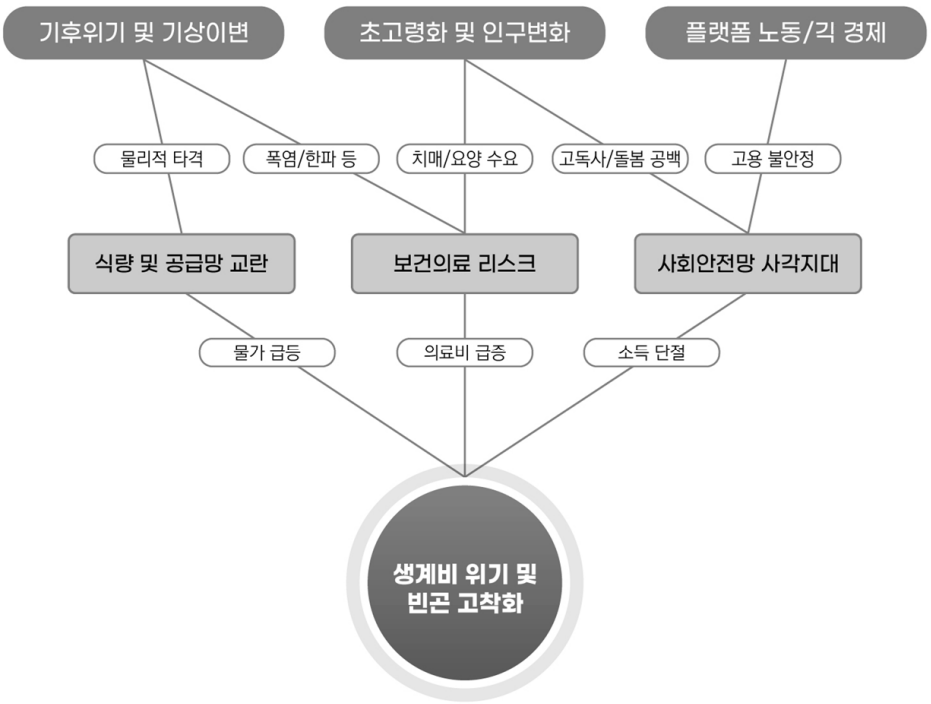
은 2,800억 달러(한화 약 370조 원)에 육박했으나, 이 중 민간보험이 인수한 담보 손실액은 1,080억 달러에 불과하여 약 61%에 달하는 1,720억 달러가 보장 공백(Protection Gap)으로 방치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이변의 빈도 급증은 기후 리스크의 통계적 '두꺼운 꼬리(Fat-tail)' 현상을 심화시켜, 전통적인 요율 산출 방식을 무력화하는 초위험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

5) ILO(2021), pp. 135~152를 참조함.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형식상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분류되어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전통적인 고용 기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혜택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이러한 비정형 노동자층의 확산은 초위험사회에서 가계의 소득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생계비 위기(Cost-of-living crisis)와 결합할 때, 이들은 리스크를 흡수할 재무적 완충 장치(Buffer)가 전무하여 외부의 미세한 충격에도 즉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취약성의 고착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큼

6)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 및 자산 분위별 '재무적 완충력(Financial Buffer)'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동일한 거시경제적 충격(Asymmetric Shock) 시나리오 하에서도 하위 20%(제1분위) 가구는 저축액 고갈과 고금리 채무 의존으로 인해 자립 기반을 재건하는 데 상위 20%(제5분위) 가구보다 평균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초위험사회의 다중위기가 단순한 일회성 피해를 넘어,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기폭제로 작용함을 방증함

생하더라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회복시간은 상위 20% 가구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높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물리적 완충력(Buffer)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 결국 다중위기는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더욱 확대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Ⅱ-1〉 글로벌 핵심 거시위험 인자 간의 상호연결망



자료: WEF(2023)의 글로벌 리스크 상호연결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다. 리스크 패러다임의 전환

초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중위기는 보험산업의 존립기반인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 메커니즘은 독립적이고 유사한 위험들이 대량으로 모였을 때 전체적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과 각 위험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독립성 가정에 기초한다. 프랭크 나이트의

이론[7]에 따르면, 상업보험은 다수의 독립적인 위험을 결합하여 전체 손실을 대등하게 분산하고 통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작동한다. 그러나 다중위기가 일상화되는 초위험사회에서는 각 위험 간의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되면서 위험간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게 수렴하는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위험 간의 독립성 가정이 무너지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산 가능한 위험(Diversifiable Risk)의 공간은 극도로 축소되며, 시장 전체가 동시에 타격을 입는 분산 불가능한 시스템적 위험(Non-diversifiable Systemic Risk)이 전면화된다.

글로벌 보험 연구기관인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는 기후위기나 팬데믹, 글로벌 사이버 공격 같은 리스크는 개별 가입자 간의 위험 동조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8] 위험 간의 상관관계가 극도로 높아지면 특정 시점에 막대한 규모의 보험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청구되면서 보험회사의 자본여력을 초과하는 인수 불능(Uninsurability)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었던 위험들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산업으로 전이되는 리스크의 연쇄반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산 가능한 위험의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 전체가 동시에 타격을 입는 분산 불가능한 시스템적 위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통계적 기법에만 의존하는 상업보험 모델은 초위험사회의 복합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이는 위험의 사후적 전가를 넘어 사전적 예방과 사회적 거버넌스를 결합한 새로운 위험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7) 시카고학파 거두인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Frank H. Knight)는 과거의 통계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래 발생 확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위험(Risk)'으로, 확률분포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진정한 불확실성(True Uncertainty)'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음. 보험경제학적 관점에서 상업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나이트식 위험(Knightian Risk)'만을 인수의 대상으로 삼음. 그러나 리스크 간 상관계수가 급증하는 초위험사회에서는 독립성 가정이 파괴되면서, 리스크의 성격이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거대 불확실성(Knightian Uncertainty)의 영역으로 강제 전이됨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Frank H. Knight(1921), Part III, Chapter VII 참조바람

8)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 2023)의 저자인 카이-우베 찬츠(Kai-Uwe Schanz) 박사는 기후위기와 상업적 사이버 리스크가 전통적 보험의 대전제인 '위험의 무작위성(Randomness)'과 '상호독립성(Independence)'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정밀 분석하였음. 보고서는 전 지구적 공급망과 디지털 초연결성이 위험의 동조화를 가속화하여 '분산 불가능한 시스템적 누적 리스크(Systemic Accumulation Risk)'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업보험의 담보 역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동적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 모델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손실을 미리 막는 '사전적 예방 서비스(Risk Prevention)'를 내재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PPP)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Geneva Association(2023), pp. 4~18 참조바람

라. 글로벌 보장 공백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리스크 패러다임의 전환과 상업보험의 적응 한계는 전 지구적인 보장 공백(Protection Gap)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장 공백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의 총액과 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Swiss Re(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보장 공백 규모는 자연재해, 보건, 사망리스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8조 달러(한화 약 2,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보장 공백은 취약계층과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된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약 40% 수준이었으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5% 미만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대한 보장 공백은 단순히 개별 가계의 경제적 파산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저해하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낳는다. 중요한 점은 이 보장 공백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자원 보유량이 적은 계층에게 집중되는 '위험의 역진성(Risk Regressivity)'을 띤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스테판 할레가트(Stéphane Hallegatte) 연구[9]가 증명하듯, 상업보험시장이 초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료를 올릴 때 고령자, 유병자,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다.

보호받지 못하는 리스크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내모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유발한다. 보험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난이나 질병을 겪은 취약계층은 기초자산을 매각하거나 고금리 채무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교육 및 생산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져 세대 간 빈곤 대물림을 고착화한다. 또한 민간보험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대규모 손실은 결국 공공 부문의 재정부담으로 전이되어 국가의 복지 예산과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초위험사회의 보장 공백 문제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실패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안전망으로서 포용보험의 도입이 강력히 요구되는 근거가 된다.

9) 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석 경제학자인 스테판 할레가트(Stéphane Hallegatte) 외(2017)는 동일한 거대 재난(초위험)이 발생했을 때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자산과 재무적 완충 장치가 부족한 취약계층이 입는 실질적 후생손실(Welfare Loss)이 기하급수적으로 크다는 위험의 역진성(Risk Regressivity)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였음. 특히 보고서는 상업보험시장의 가격 상승과 인수 거부가 고령자, 유병자 등 취약계층을 보장 공백에 가장 먼저 노출시키며, 단 한 번의 외부 충격이 자녀교육 포기나 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세대 간 '빈곤 함정(Poverty Trap)'을 고착화시킨다고 경고함. 자세한 내용은 Hallegatte, S. et al.(2017), pp. 11~35 참조바람

마. 초위험사회에서 전통적 상업보험의 한계

전통적 상업보험의 핵심 경쟁력은 위험의 선별(Risk Selection)에 있다.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 발생 확률이 높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계층을 집단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초위험사회에서 이러한 배제의 논리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고령자, 유병자, 혹은 특정 위험지역 거주자들은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산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시장 배제 현상을 겪게 된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리인 위험분산이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특히 정형화된 데이터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나 신종 위험 노출군은 인수 심사단계에서 평가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되어 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업보험의 또 다른 한계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적·수동적 보상 체계에 있다. 현행 보험시스템은 피보험자가 손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증명 책임을 전제로 하며, 손해사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긴급한 구호와 회복이 필요한 다중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후 재난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저소득층이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에게 수개월이 소요되는 손해사정 절차는 보험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복잡한 보상청구 프로세스는 그 자체로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어 실질적인 수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전통적인 장기보험상품은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경직된 구조를 지닌다. 이는 소득의 변동성이 큰 플랫폼노동자나 저축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의 실효(Lapse)로 이어진다. 보험 실효는 단순히 보장이 중단되는 것을 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못 미치는 구조적 특성상 취약계층의 자산 손실을 확정 짓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빈곤으로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역설적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상업보험시장은 거대 규모의 시스템 리스크를 감당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기후위기나 팬데믹처럼 사회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민간 시장은 이러한 위험을 인수한 뒤 그 손실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외부화하거나 보장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결국 공공 부문의 재정부담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진다. 민간보험이 흡수하지 못한 대규모 보장 공백은 국가 재정에 의한 사후적 구호예산 지출로 메워지게 되며, 이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체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업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용보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표 Ⅱ-2〉 상업보험의 한계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업보험의 구조적 특성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인수	위험의 선택 및 배제의 논리	고위험군·저데이터 계층의 가입 거절 및 시장 소외
보상	사후적 증명 및 복잡한 절차	지급 적시성 결여 및 정보 약자의 수혜 포기 유도
상품구조	경직된 보험료 납입 체계	소득 변동성 대응 불가 및 유동성 위기 시 자산 손실
리스크관리	시스템 리스크 인수의 한계	보장범위 축소 및 사회적 비용의 공공전이

자료: IAIS(2015a), IAIS(2015b) 및 제네바협회(2021)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바. 보장 사각지대 확대와 보험의 사회적 가치 재정의

상업보험의 엄격한 인수 기준과 경직된 구조는 필연적으로 범사회적인 보장의 사각지대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보장의 사각지대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역진성과 결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자, 유병자, 플랫폼노동자 등 복합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계층일수록 민간보험시장에서 배제되어 미보장 손실을 온전히 개인의 자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결국 일회성 재난이 취약계층의 영구적 빈곤으로 직결되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가동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보장의 사각지대 확대는 민간 금융시장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적 부담으로 전이된다. 민간 상업보험이 흡수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긴급구호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부문의 재정지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거시 환경 속에서 국가의 복지예산과 공적연금 등의 공공 안전망 역시 그 여력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 즉 민간 상업보험이 효율성을 이유로 위험 인수를 회피

하고, 공공 부문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민간 안전망의 동반 한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위험분산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 구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핵심 가치사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과거 통제 가능한 위험 환경 하에서는 사고 발생 후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는 사후적 보상(Ex-post Compensation)만으로도 보험의 경제적 효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피해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초위험사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만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의 역할은 위험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사전적 예방(Ex-ante Prevention)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만성질환 모니터링, 플랫폼노동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연계 등 사물인터넷(IoT)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단순한 '재무적 위험 인수자'에서 벗어나 피보험자와 함께 위험을 통제하는 '능동적 리스크관리 파트너'로 거듭나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다중위기 시대의 보험산업은 단순한 상업적 금융업을 넘어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그 가치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험의 사회적 가치는 '접근 불가능한 이들을 시장으로 포용(Inclusion)하고, 사전예방과 현장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취약계층의 회복탄력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전통적 보험모델이 이윤 창출과 주주가치 극대화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난제(초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현대 초위험사회가 요구하는 진화된 형태의 신 포용보험(차세대 포용보험) 생태계 조성이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표 Ⅱ-3〉 초위험사회 도래에 따른 보험의 가치 패러다임 전환

구분	전통적 상업보험 패러다임	초위험사회 신패러다임(포용보험 지향)
핵심기능	위험의 사후적 전가 및 금전 보상	위험 사전예방과 실물 돌봄서비스 결합
타깃고객	통계적 위험평가 가능한 표준집단	전통적 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보험회사 역할	수동적 위험 인수자, 보험금 지급자	능동적 리스크관리 파트너, 회복 지원자
창출 가치	주주가치 극대화, 재무적 효율성	사회적 회복탄력성 제고, ESG 실현
국가-시장 관계	공공안전망과 분리된 독립적 민간시장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완재 역할 수행

자료: 제네바협회(2021)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2. 포용보험의 개념과 역할(필요성)

가. 포용금융(보험)의 발전 단계

1) 마이크로크레딧의 태동과 그라민은행 모델

현대적 포용금융의 역사적 기원은 1970년대 후반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가 주도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운동, 즉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의 설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누스 모델은 1976년 조브라(Jobra) 마을의 빈곤층 42명에게 단돈 27달러를 빌려주었던 실증 실험에서 출발하여, 전통적 상업금융의 대전제였던 물적 담보(Collateral)의 개념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라민 은행이 물적 담보 없이도 98%가 넘는 경이적인 원리금 상환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창적인 5인 연대 모임 기반의 신용 메커니즘에 있었다. 마을 주민 5명이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출을 신청하되, 두 명의 회원이 먼저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해야만 다음 회원에게 대출 자격이 부여되는 단계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특히 대출 대상의 95% 이상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가계 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평판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금융계약의 사회적 담보로 전환시키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이 단계의 핵심 성과는 제도권 금융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극빈층에게 생산적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재무적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출 중심의 단선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은 거대한 외생적 충격 앞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자본을 공급하여 소규모 가내수공업이나 농업을 시작하게 유도하더라도 방글라데시를 정기적으로 덮치는 대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나 가구주의 갑작스러운 질병·사망 등 복합리스크가 발생하면 가계의 생산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사후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금융은 잔인한 부메랑이 되었다. 사고로 인해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빈곤층 가계는 그라민 은행의 주간 원리금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채를 얻어 대출을 돌려막는 이른바 부채의 늪의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자산 축적을 돕는 신용의 공급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속시킬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거대 손실로부터 축적된 자산을 방어해주는 보험적 방패가 결합하지 않는다면 포용금융의 공익적 취지 자체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Ⅱ-4〉 마이크로크레딧의 핵심성과와 구조적 한계

분석차원	핵심성과	구조적 한계
금융접근성	물적 담보를 배제한 소액대출로 빈곤층의 자본 기회 마련	거대재해·질병 발생 시 소득단절 및 리스크 방어력 전무
사회·경제적 효과	여성 중심 대출을 통한 가계 내 권익신장 및 자활 기반 구축	다중 충격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연쇄대출(부채의 늪) 위험
운영 메커니즘	5인 연대모임 체계와 상호감시로 높은 상환율(98%) 달성	공통위험(Covariate Risk) 발생 시 집단 전체의 동시 파산

자료: 무하마드 유누스·알란 졸리스(2002), World Bank Group(2015)의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로의 확장과 소액보험(Microinsurance)의 등장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모델이 비영리·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했다면, 1990년대 초반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를 상업적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갖춘 제도적 금융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이 일어났다. 특히 볼리비아의 BancoSol(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상업은행)과 ProCredit 등은 빈곤층 대상의 금융서비스가 자선적 원조에 머물지 않고도 철저한 신용평가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은 중남미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적기적소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외연을 비약적으로 넓혔다.[10]

10) 1990년대 초반 볼리비아에서 설립된 BancoSol(Banco Solidario)은 NGO인 PRODEM의 금융 부문이 상업은

1990년대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체제는 단순한 자본 공급(Credit)을 넘어 저축(Savings)과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포용금융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 시기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거둔 핵심성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포용금융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중남미의 BancoSol이나 ProCredit 같은 기관들은 철저한 신용평가 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빈곤층 대상 금융서비스가 자선적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익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리스크관리의 내재화에 기여하였다. 가계가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고리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경로를 보험과 저축이라는 방어막을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계경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역량을 축적하였다. 비정형 노동자와 영세상인의 상환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신용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은 초위험사회의 구조적 복합성 앞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대규모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재난이나 기후 위기 발생 시 발생하는 동조화 리스크(Covariate Risk)에 취약했다. 재보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다수의 가입자가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소액 보험회사의 자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2010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사태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업화가 리스크관리체계 없는 과도한 양적 성장에 집중할 때, 어떻게 거대 위기로 전이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필립 마더(Philip Mader 2013)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인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빈곤층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 경쟁과 상환 압박을 통해 소액금융을 가계 부채의 늪으로 변질시켰으며, 이는 결국 가입자 전체의 동시 부실을 야기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되었다. 또한 보장범위가 사망이나 기초 질병 등 지나치게 단순한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초고령화나 복합 만성질환 등 현대 사회의 입체적인 생활리스크를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디지털 인프라 결여로 인해 유통 및 관리 비용이 높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여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

행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상업은행으로, 빈곤층 대상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음. 또한 ProCredit Holding은 동유럽 및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발 지향적 상업은행' 모델을 구축하여, 엄격한 신용평가 기반의 리스크관리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표준을 정립하였음. 이들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은 Robinson(2001), 세계은행(World Bank)의 금융부문 평가 보고서, BancoSol 웹사이트(www.bancosol.com.bo), ProCredit Holding(www.procredit-holding.com), 그리고 세계은행 산하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협의체인 CGAP 사이트(www.cgap.org)에서 'BancoSol'이나 'History of Microfinance'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음

적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단순한 금융상품의 공급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포용적 안전망(Inclusive Safety Net)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강력한 학술적·정책적 근거가 되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생태계 내에서 소액보험이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통합적 제휴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소액보험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넘어, 이미 견고한 고객 접점과 신뢰를 확보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혹은 디지털 플랫폼을 핵심 유통채널로 활용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빈곤층 가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용하던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MFI를 넘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나 핀테크 플랫폼이 가세하며 유통 체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이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파트너-대리인 모델'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보험료 수납과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통 체계의 진화는 소액보험이 더 이상 독립된 부수 상품이 아니라, 대출·저축·결제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적 금융생태계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즉, 소액보험의 성패는 얼마나 신뢰받는 금융생태계 내에 효과적으로 안착하여 고객의 일상적 금융행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림 Ⅱ-2〉 소액보험의 리스크 방어 및 회복 메커니즘



자료: Lloyd's(2009)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함

1990년대 초반,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는 단순한 대출 중심의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 저축과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적 보호체계로 개념적 확장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과 실천적 노력이 있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빈곤 완화를 위한 금융(Finance for the Poor)'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빈곤층 가계의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국제 마이크로보험 협력체(Microinsurance Network)의 출범과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의 정책적 지원은 소액보험을 단순한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독립적인 금융 인프라로 육성하는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11] 이 시기의 소액보험은 전통적 보험의 수익성보다는 위험의 분산과 가입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저축한 자산이 재난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돕는 경제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험이 금융시스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닌 빈곤 탈출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입증하는 단계였다. 소액보험의 유통체계는 단순히 보험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의료 및 복지 인프라와 얼마나 밀착하여 신뢰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Lloyd's 2009).

3) 글로벌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 시대의 도래와 인프라의 통합

2010년대에 접어들며 포용금융은 소수 전문기관의 분절적인 노력을 넘어 G20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시금융 전략으로 격상되었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출범시키며 '금융포용을 위한 9대 원칙'을 채택하고 이를 글로벌 거시경제 의제로 격상하였다.[12] 이후 세계은행은 '2020년까지 전 국민 금융접근성 확보(UFA 2020)'를 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글로벌 핀덱스(Global Findex Database)를 발간하여 금융포용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3] 이는 포용금융이 개별 기관의 미시적 원조를 넘어 국가적

11)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보험 협력체(Microinsurance Network)의 발족과 세계은행 산하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의 개입을 통해 가속화되었음. 특히 2005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를 기점으로 국제기구들은 소액보험의 표준 모델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음. 관련 논의의 상세한 학술적 배경과 당시 글로벌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은 Churchill, C.(2006) 및 CGAP의 관련 정책 브리프(Latortue, de Montesquiou & Ward 2008)를 참조할 수 있음

12)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출범시키며, 금융포용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금융포용을 위한 9대 원칙(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을 채택하였음. 동 원칙은 금융 인프라의 표준화, 디지털 혁신 촉진,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국가적 금융시스템 설계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GPFI 2010)

금융인프라 구축과 규제 정비를 포함하는 거시경제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포용금융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인프라와의 결합이다. 과거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이 물리적 지점과 인적 대면 접촉에 의존하여 확장성에 한계를 겪었다면, 디지털 기술은 이 물리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머니(Mobile Money)의 확산은 저비용·고효율의 금융 유통망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핀테크 플랫폼은 그간 금융권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의 금융이력을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14]

포용금융 시대의 보험은 독립적인 상품의 단계를 넘어, 디지털 결제망과 복지 체계를 하나로 잇는 '통합적 리스크 방어 인프라'로 기능한다. 국가의 사회안전망(복지 지급금)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즉시 지급되고, 여기에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형태의 포용적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거대 리스크(대재난 등) 발생 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즉각 산출하게 하며, 이는 과거 소액보험회사가 재보험 부재로 파산했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가 되었다. 이제 보험은 단순한 독립적 상품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 결제망과 복지 체계를 하나로 잇는 '통합적 리스크 방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실험적인 모델을 넘어 실제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로 안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과 필리핀의 디지털 통합 모델을 들 수 있다.

브라질은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전용 디지털 지갑을 연동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이 보험에 자동가입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이 동일한 디지털 계좌로 즉시 지급되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한편, 태풍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기상 관측 데이터와 모바일 결제망(GCash)을 결합한 '파라미터식(Parametric) 보험'인 'PARA-SURE'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태풍의 강도가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는 즉시 별도의 피해 신고 절차 없이 거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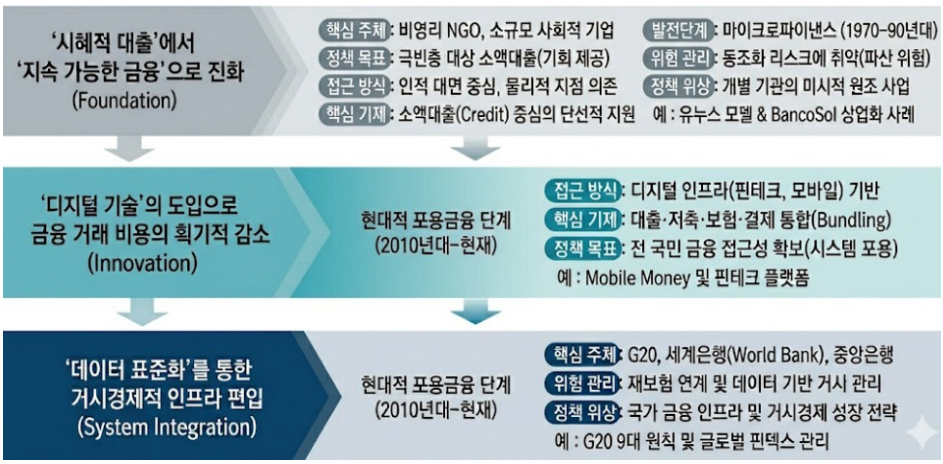
13) 세계은행은 2011년부터 전 세계 성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행태를 측정하는 글로벌 핀덱스(Global Findex Database)를 발간하여, 국가별 금융포용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표준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는 금융포용 수준을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적 성과 지표로 관리하려는 시도로서, 포용금융이 분절적 원조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인프라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함(Demirgüç-Kunt et al. 2015; World Bank Group 2015)

14) 취약계층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혁신한 대표적 사례로는 아프리카 케냐의 M-Pesa가 있음. M-Pesa는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및 결제 이력을 축적하여, 공식적인 금융 기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실시간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였음(GSMA 2015). 또한 중국의 Ant Group(Alipay)은 전자상거래 결제 데이터와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결합한 알고리즘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 바 있음(World Bank Group 2018). 이러한 사례들은 전통적 금융기관의 물리적 문턱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신용 창출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음

의 모바일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입자의 피해 회복탄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보험이 가입자가 직접 청구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사후적 보상'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연동되어 재난 발생 시 즉각 작동하는 '실시간 안전망(Real-time Safety Net)'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과거 소액보험회사가 재보험 부재와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파산하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2010년대 이후의 포용금융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을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자산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가졌던 '성장의 마중물' 기능과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지속가능한 금융' 기능을 디지털 기술로 통합하여,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3〉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자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나. 포용보험 개념의 재정립

1) 포용보험 개념의 진화

포용보험(Inclusive Insurance)에 대한 논의는 과거 미소보험(Microinsurance)[15]이라는 좁은 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금융포용의 핵심 기제로서 그 개념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IAIS 2015b; Geneva Association 2024; 홍민지 2018; 손재희 2023; 정광민·한상용 2025; 한상용 2025)는 포용보험을 단순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의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 배제된 모든 개인과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포용보험은 제도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부터 중하위 소득계층까지를 아우르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재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AIS(2015b)는 "가난한 계층이나 좁은 의미의 저소득 시장을 겨냥한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에서 소외되었거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을 포용보험으로 정의한다. 또한 "포용보험은 소외되거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장을 겨냥하는 반면, 미소보험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이라며 포용보험과 미소보험을 구분한다. Geneva Association(2024)은 "금융포용은 인구의 모든 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적절한 범위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신용, 저축, 결제 및 보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홍민지(2018)는 "포용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이외에 중하위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재희(2023)는 "포용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 소외된 개인과 사업자에게 다양한 사고 발생 비용을 보장하거나 이들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으로 정의한다. 정광민·한상용(2025)은 "포용보험은

15) Microinsurance는 소액보험 또는 미소보험으로 번역되는데, 빈곤한 개인의 필요소득 및 위험 수준에 맞춘 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위험(가난, 질병,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는 ILO(2008)의 정의에 동조하며 보장내역이 소액인 보험이 아니라 빈곤 계층을 위한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미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석승훈·홍지민(2022)의 용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소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금융소외(접근·자격·가격·마케팅·자기배제·디지털 문해력 등)로 인해 보험상품으로 접근이 어려운 다양한 계층(저소득층, 여성, 고령층,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게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한상용(2025)은 "포용보험은 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자,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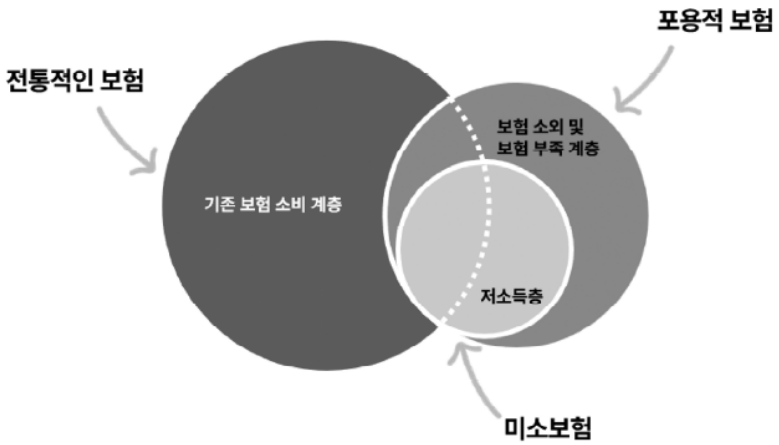
최근 연구들은 포용보험의 핵심 요건으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 가입자가 보험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보험료를 지불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 접근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井上 武(2022)와 정광민·한상용(2025) 등은 포용보험이 개인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물적 자본축적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 금융인프라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흐름은 포용보험이 개별 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을 넘어 복합적 위험(기후변화, 팬데믹,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적 시스템의 필수요소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선행연구들이 지향하는 포용보험의 종착지는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설계·판매하는 단편적 모델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복지체계와 민간의 인슈어테크 기술이 결합하여 가입자의 실질적인 위험 대응력을 강화하는 통합적 안전망의 구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용보험에 관한 국내외의 정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외연을 확장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보편적 안전망으로의 전환이다. 포용보험은 더 이상 특정 빈곤층을 위한 시혜적 수단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시스템 내에서 모든 시민이 금융소외 없이 위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 사회 인프라로 인식된다. 둘째, 실질적 접근성의 강조다. 단순히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상품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달 가능성이 포용보험의 핵심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위험 대응의 다층성이다. 포용보험은 단순한 소득보전을 넘어 인구고령화·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가계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통합적 솔루션을 지향한다.

포용보험의 개념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범주와 특성에 따른 미소보험·포용보험·대중시장보험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시장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대상 고객의 범위와 유통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미소보

험(Microinsurance)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특화 상품으로 빈곤층의 기초적인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집중한다. 이보다 넓은 개념인 포용보험(Inclusive Insurance)은 미소보험을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배제되었거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적 영역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시장 보험(Mass-market Insurance)은 표준화된 상품을 광범위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시장으로, 포용보험을 포함하는 가장 큰 범주라 할 수 있다. 포용보험은 대중시장 보험이 가진 상품의 단순성과 디지털 유통의 효율성을 차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되, 금융소외계층의 특수성에 맞춘 정교한 맞춤형 설계를 결합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적 구조를 갖는다.

〈그림 Ⅱ-4〉 보험시장의 구분



자료: MAPFRE Economics(2020); 정광민·한상용(2025), p. 17에서 재인용함

포용보험의 개념적 진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시혜적 미소보험'에서 '보편적 회복탄력성'으로의 개념의 외연 확장이다. 과거의 포용보험이 빈곤층 대상의 소액·단기 보장에 집중했다면, 최신 연구들은 이를 사회적 배제와 복합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수기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는 보험이 가계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관리하는 인프라임을 방증한다. 둘째, 효과적 접근성의 재조명이다. 다수의 연구는 공급자의 상품 제공 그 자체보다 수요자의 부담 가능성, 도달 가능성을 강조한다. 즉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가입자가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정보 격차), 가입 및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면(절차적 장벽) 포용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혁신과 휴먼 인터페이스의

딜레마이다.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인슈어테크)을 활용한 비용절감과 접근성 제고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보험의 주 대상인 취약계층이 디지털 문맹과 정보 소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효율성과 인적 채널의 신뢰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해법은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인적 채널을 통한 접근성 강화가 매우 유효한 학술적·정책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민관협력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포용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금융기관, 통신사, 그리고 정부(공적 복지데이터 공유 등)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성공의 전제조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포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개별 보험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의 복지 데이터와 민간의 인슈어테크 및 인적 영업망이 결합할 때 비로소 포용보험은 보장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거시경제적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2) 전통적 포용보험의 한계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포용보험 공급 모델은 표준화된 저가상품을 대면채널 위주로 판매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급자 주도형 비즈니스 방식'에 머물러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장 실패와 낮은 실효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시장을 이탈하고 고객은 보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속 불가능한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즉 포용보험의 개념적 외연은 확대되어 왔으나, 전통적인 공급모델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시장의 실패와 낮은 실효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상품의 문제를 넘어 보험회사의 시장 이탈과 보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 포용보험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가상품 공급 중심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수요의 괴리이다. 기존 포용보험 논의는 보험료를 낮추고 상품구조를 단순화하는 공급자 주도형 접근성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는 단순한 저가상품 보급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이후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마이크로보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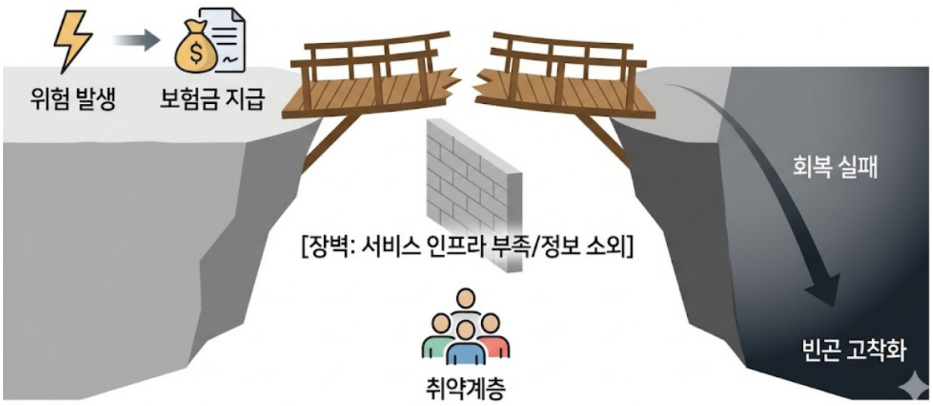
16) 전통적 포용보험은 개별 판매형, 대리 판매형, 강제 가입형, 집단 결정형, 지역 자조형, 자동가입형, 소극적 판매형, 서비스 기반 판매형 등 8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IAIS(2015a), 정광민·한상용(2025)을 참조하길 바람

기금(Microinsurance Innovation Facility)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를 억지로 낮춘 단순 저가 상품은 오히려 가입자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 낮은 갱신율과 잦은 실효(Lapse)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ndek et al. 2014). 기존의 정형화된 저가상품은 위험관리의 본질적 가치보다 판매실적을 위한 미시적 보장에 머물러 있어,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는 공급 수치상의 포용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적 성장의 함정을 드러낸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역설과 기술 기반 포용의 사각지대이다.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포용은 비용절감과 가입 편의성 측면에서 혁신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낳는 디지털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활용이 미숙한 고령층이나 통신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 거주자는 오히려 디지털화된 포용보험 생태계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아가 알고리즘 기반의 정교한 위험평가는 데이터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나 신종 취약계층을 인수 불가능한 고위험군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영국 계리사회(IFoA)와 Fair By Design의 공동 연구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언더라이팅이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빈곤 프리미엄(Poverty Premium) 현상을 유발하여 합법적인 금융 배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IFoA & Fair by Design 2021). 기술이 포용의 도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배제 도구로 작동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셋째, 사후적·금전적 보상체계의 단편성과 돌봄 서비스의 부재이다. 전통적 포용보험은 사고 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보상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인지취약 고령자나 중증 유병자, 혹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라 즉각적인 돌봄서비스와 실물 지원이다. 금전적 보상은 인플레이션이나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그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쉬우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을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차적 곤란을 겪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보험연구기관인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 2021)는 다중위기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후적 현금 보상(Risk Transfer) 모델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전 예방 및 현장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보험의 가치가 전면 재정의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서비스가 거세된 금전 중심의 보장체계는 초위험사회의 다각적인 위협을 포괄하지 못하는 단편적 모델에 불과하다.

〈그림 Ⅱ-5〉 서비스 부재형 보험의 한계 구조도



넷째, 공공 복지시스템과의 분절성 및 리스크관리의 파편화이다. 현재의 포용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나 별도의 특화상품 형태로 운영되어, 국가의 공공복지 및 사회안전망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위험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지원이 중복되거나, 양측 모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영역이 빈번히 발생한다. 취약계층의 리스크는 보건, 노동, 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보험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는 초위험사회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실패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저가 상품을 공급하면 고객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입을 주저하거나 이탈(수요 위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해당 시장을 '비매력적인 시장'으로 낙인찍어 투자를 줄이고, 고객에게는 더욱 부실한 상품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존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의 삶(Context)'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보험을 사적 계약으로만 치부하고 사회적 시스템의 일부로 보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현대적 포용보험 모델은 디지털 효율성을 수단으로 삼되, 인적 채널을 통해 기술 장벽을 허물고 공공 복지 데이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결합하여 '가입자의 삶을 지탱하는 실시간 안전망'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표 Ⅱ-5〉 기존 포용보험 모델과 신 포용보험 모델의 기능 비교

구분	기존 포용보험 모델	신 포용보험 모델
보상방식	금전적 현금 보상 중심	금전보상 + 돌봄서비스·현물 지원
리스크관리 시점	사고 발생 후 사후적 보상	예방(IoT)·보상·재활(돌봄)의 통합
접근 채널	디지털 중심(언택트)	디지털(효율성)+인적채널 하이브리드
정책 연계성	민간 주도의 파편화된 운영	정부 복지데이터와 결합된 통합 안전망
가입자 효용 체감도	낮음(보험회사 중심 상품설계)	높음(개인 맞춤형 솔루션 중심)

자료: 주요 포용보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3) 초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신 포용보험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지향점

가) 현대적 포용보험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초위험사회에서 포용보험의 고도화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상품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다중위기 구조 속에서, 기존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첫째,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 격차(Protection Gap) 완화이다. 플랫폼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노인 빈곤층 등 신종 취약계층은 기존의 경직된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생존을 위협받는다. 현대적 포용보험은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완충재로서, 국가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보호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역설(Digital Paradox)에 대응하는 금융 정의(Financial Justice)의 실현이다. 급격한 디지털 금융화는 비용 효율성을 제고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금융생태계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대적 포용보험은 기술을 통해 금융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되, 전통적인 인적 채널을 병행하여 기술적 문턱을 낮춤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소외됨 없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초위험사회(Hyper-risk Society) 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완충 인프라의 필요성이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거대 리스크는 개별 가계의 경제적 파산을 초래하

고 이는 국가 전체의 소비 위축과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현대적 포용보험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계의 자산 보존을 돕고, 국가의 물적 자본을 보호하는 거시경제적 완충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 신 포용보험 패러다임의 전략적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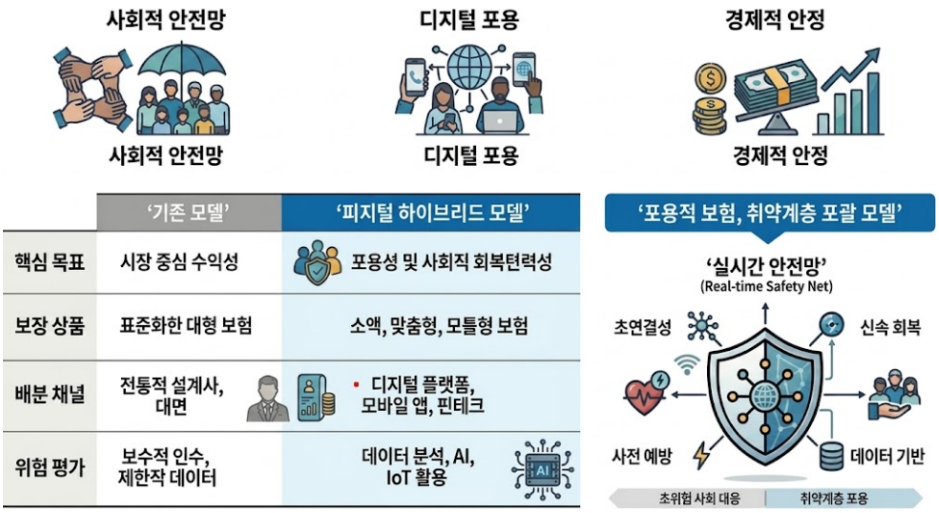
이상에 근거해 신 포용보험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삶을 지탱하는 '실시간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적 가치를 지향한다.

첫째, '금전적 보상'에서 '생애주기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의 전환이다. 보험의 본질을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현금'이라는 수동적 보상에서, 가입자가 사고 이전의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치료·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보험산업이 단순한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을 넘어, '위험의 관리와 예방(Risk Prevention)'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적극적 복지 파트너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맥락 중심(Context-centric)'으로의 보호 체계 확립이다.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은 가입자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고용 형태, 거주 환경, 디지털 문해력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신 포용보험은 공공의 복지 데이터와 민간의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입자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하는 '맥락적 보호(Contextual Protection)' 모델을 지향한다.

셋째, '독립적 파편화'에서 '민관 연계형 통합 모델'로의 진화이다. 개별 보험회사의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정부의 공적 복지 인프라와 민간의 데이터·리스크관리 역량이 결합된 '공유가치 창출형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공공정책의 최전선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공 부문은 민간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연대형 리스크관리 체계'는 포용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림 Ⅱ-6〉 초위험사회 신 포용보험 모델의 발전 방향



다. 포용보험의 가치체계와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

1) 포용보험의 가치체계(Value System)

포용보험이 초위험사회에서 단순한 상품 제공을 넘어 거시경제적 시스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체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학계의 최신 연구를 종합하여 포용보험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포괄적·연결적·사회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하였다.

첫째, 포괄적 가치(Holistic Protection)이다. 이는 보험의 가치를 금전적 보상이라는 단편적 범주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2020b)는 금융포용의 성패가 단순한 '계좌 보유'가 아닌, 금융상품의 이해도(Understandability)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을 포괄하는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포용보험의 포괄적 가치는 가입자의 생애주기적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내재화하여 가입자가 사고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둔다.

둘째, 연결적 가치(Data-Integrated Hybrid Value)이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접근성을 제고하나,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를 야기할 위

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GAP(2019)과 AFI(2020)는 '에이전트 네트워크(Agent Networks)'와 같은 인적 채널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한다. 즉,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과 대면 접점인 에이전트의 신뢰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은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결정적 기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의하는 '연결적 가치'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함과 동시에, 인간 친화적 접점을 통해 금융의 도달 범위를 완성하는 상호보완적 운영 원칙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Social Resilience)이다. 포용보험은 개별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을 넘어, 국가 전체의 리스크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Porter&Kramer(2011)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CSV)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보험회사가 취약계층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국가는 공적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상기의 3대 가치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삶이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포괄적 가치는 보호의 내용을, 연결적 가치는 보호의 전달 방식을, 사회적 가치는 보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은 포용보험이 왜 초위험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2) 사회적 회복탄력성의 재정립과 보험의 역할

현대 초위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관리 지표인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 이전의 상태로 신속히 복귀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도약하는 시스템적 역량을 의미한다. 전통적 보험이 사고 발생 이전의 재무적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포용보험이 지향하는 회복탄력성은 가입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망까지 보호하는 통합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원 보유량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단 한 번의 충격이 삶의 궤적을 영구적으로 이탈시키기 쉬우므로, 보험은 이들의 회복 탄성계수(Elasticity of Recovery)를 높여주는 핵심적인 사회적 완충장치로 기능해야 한다(Hallegatte et al. 2017).

〈표 Ⅱ-6〉 전통적 보험과 포용보험의 가치체계 비교

평가항목	전통적 보험의 가치체계	포용보험의 가치체계
핵심지표	손해율 및 재무적 수익성	일상 복귀 속도 및 빈곤 탈출률
위험 대응	사고 후 금전적 손실 보전	사고 전 예방 및 사고 후 실물 케어
사회적 기여	개별 계약자의 재무적 안정	사회적 안전망 보완 및 국가 재정 절감
가치 측정	주주 이익 및 자본 효율성	사회적 투자수익률 및 ESG 성과

자료: UN DRR(2019) 및 주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최근 국제사회는 재난과 리스크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자산 복구에서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UN DRR(2019)은 재난으로 인한 가계의 복지 손실을 측정함에 있어, 자산 파괴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인 소비 위축과 복지 수준의 저하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사회적 회복탄력성 제고와 관련한 보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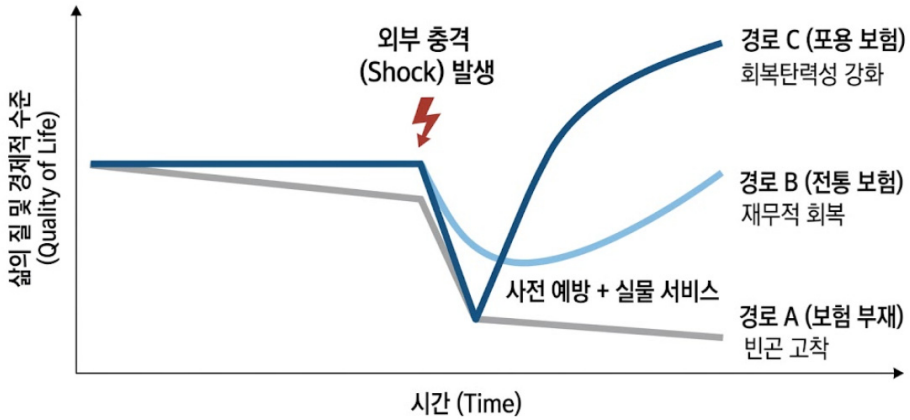
첫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이다. 포용보험이 창출하는 가치는 개별 가계의 위험분산을 넘어 사회 전반의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확장된다. 취약계층이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안전망을 갖게 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이는 능동적인 경제활동과 소비로 이어진다. 반면, 보장 사각지대가 방치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시스템 전체의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차세대 포용보험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하는 거시적 가치를 창출한다.

둘째, 사전 예방적 리스크관리(Preventive Risk Management)의 경제적 타당성이다. 사고 발생 후 막대한 구호자금을 투입하는 사후적 처방보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사전적 예방이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인지취약 고령자에게 상시 돌봄서비스(IoT 모니터링 및 인적 매니지먼트)를 결합한 포용보험을 제공하여 중증치매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로 나타난다(UN DRR 2019). 이는 포용보험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투자임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포용보험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는 민간보험회사와 공공이 협력하는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다. 민간의 혁신적 리스크관리 기술과 정부의 데이터·복지

정책이 결합될 때, 차세대 포용보험은 초위험사회의 시스템 리스크를 민관이 분담하는 선진적 형태의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림 Ⅱ-7〉 포용보험을 통한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 메커니즘



자료: UN DRR(2019) 및 Hallegatte et al.(2017) 등의 회복탄력성 모델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3. 글로벌 포용보험 규제 및 감독 동향

가. 포용보험 감독의 기본원칙

포용보험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감독체계를 넘어서는 규제적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 보험감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이하 'IAIS'라 함)는 2015년 〈포용보험시장 지원을 위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적용지침(Application Paper on Regulation and Insurance Supporting Inclusive Insurance Markets)〉을 통해 포용보험이 일반 상업보험과 차별화된 감독 접근법을 필요로 함을 명시하였다. 이 지침의 핵심은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에 있다. 비례성 원칙이란 규제당국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감독기준이나 준수요건이 해당 보험회사가 처한 위험 수준, 사업 규모, 그리고 복잡성에 정비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률적 규제(One-size-fits-all)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의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비례성 원칙이 포용보험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 기반의 규제 재설계이다. 포용보험 상품은 위험의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형 상업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나 공시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시장진입을 가로막는다. IAIS는 이러한 규제장벽이 오히려 금융소외계층을 보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됨을 지적한다. 둘째, 소비자보호와 시장 발전의 균형이다. 비례성 원칙은 결코 소비자보호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행정적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을 줄이고 그 절감분을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양질의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셋째, 감독당국의 능동적 역할이다. IAIS 권고안은 감독당국이 단순히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제거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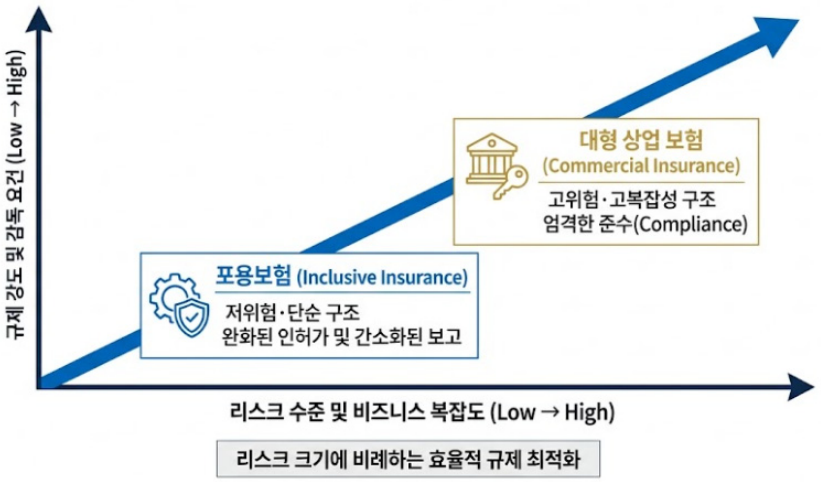
결국 IAIS가 제안하는 규제철학은 위험의 크기에 맞는 감독이다. 이는 향후 구축해야 할 혁신적 포용보험 거버넌스, 즉 민관협력을 통한 샌드박스 도입과 업무범위의 유연한 조정이 왜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정당한 시도인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논거가 된다.

〈표 Ⅱ-7〉 IAIS 비례성 원칙에 따른 규제영역별 적용방안

구분	상업보험	포용보험
비즈니스 모델	고위험·고복잡성 구조	저위험·단순 구조
적용원칙	엄격한 준수(Compliance)	비례적 규제(Proportionality)
규제요건	높은 자본금 및 공시 의무	완화된 인허가 및 간소화된 보고
규제당국 태도	감시자(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

자료: IAIS(2015b) 권고안을 종합하여 연구자 작성함

〈그림 Ⅱ-8〉 비례성 원칙 적용 도식



나. 감독의 유연화

포용보험이 초위험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보험에 적용되던 엄격한 진입장벽과 복잡한 운영규제를 포용적 비례성(Inclusive Proportionality)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글로벌 보험감독 당국은 포용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① 단계적 인허가 체계(Tiered Licensing), ② 업무범위 제한(Limited Scope) 특례, ③ 채널 및 중개인 감독 간소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감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1) 단계적 인허가 체계의 도입

일률적인 자본금 요건과 재무건전성 기준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포용보험 사업자에게는 진입 불가능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사업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인허가를 세분화하는 단계적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단계적 인허가 체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인허가 등급화이다.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위험도와 예상 가입자 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액보험 전용 면허를 신설하여 일반 생명·손해보험회사 대비 낮은 자본금으로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하나는 성장 단계별 규제강화

이다. 초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사업이 성장하여 리스크 노출 규모가 커지면 점진적으로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진화형 규제(Evolutionary Regulation)를 적용한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2) 업무범위 제한 및 상품 특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포용보험에 특화된 단순 상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감독요건을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사망, 질병, 재난 등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상품만 취급하는 경우, 복잡한 리스크관리 체계나 대규모 IT 인프라 구축 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새로운 인슈어테크 기반의 포용보험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기존 보험업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후적으로 필요한 규제만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사후감독(Post-supervision)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3) 채널 및 중개인 감독의 간소화

포용보험의 핵심인 연결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면채널의 접근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에 대한 규제 역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KYC(Know Your Customer) 룰의 완화가 필요하다. 농어촌이나 취약계층 거주지역에서 대면으로 모집할 때, 디지털 인증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인적 확인 방식을 간소화하거나 제3자(지역사회 지도자, 공공기관 등)의 보증을 활용한 인증 절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집인 자격요건의 유연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 보험설계사가 아닌 지역 에이전트(예: 우체국 직원, 마을 이장 등)도 기초적인 교육만 이수하면 소액 포용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작동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4) 위험 기반의 보고 및 공시 간소화

소규모 포용보험 사업자에게 대형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정기 공시와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구조와 보험금 지급 조건을 시각화한 요약 공시자료 만으로도 충분한 공시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약 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 주기를 차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보고 주기를 연 단위로 연장하거나, 정형화된 보고 양식을 간소화하여 규제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독의 유연화 전략은 향후 구축할 포용보험 거버넌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진입규제 완화는 단순히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혁신적 사업자가 리스크관리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을 최적화해주는 정책적 배려이다. 각국 규제당국의 경우 높은 금융소비자보호 요구 수준과 디지털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디지털 기반의 비례적 규제가 가장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이 포용보험의 모든 과정(인허가-상품-모집-보고)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그 대가로 진입과 상품 운영에서 파격적인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제와 효율의 맞교환 전략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다.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포용보험은 기존 보험업법이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AI, IoT, 빅데이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혁신이 기존 규제의 경직성과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핵심기제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이다. 해외의 주요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포용보험 상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감독체계를 학습하고 있다.

1) 영국: 혁신 허브(Innovation Hub)와 선제적 소통 모델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6년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프로젝트 이노베이트(Project Innovate)를 운영 중이다. FCA의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허브를 통해 창업 단계부터 규제당국과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한다. 이는 포용보험 사업자가 상품개발 단계부

터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여 시행착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인슈어테크 기업이 소액 단기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가입자 모집방식이나 청약 절차에서 기존 보험업법상 대면채널 의무를 면제받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프로세스를 테스트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2) 싱가포르: 규제 면제 및 완화 실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핀테크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특정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MAS는 단순히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요건이나 보고의무 등 특정 규정을 일시적 예외로 적용한다. 특히 포용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샌드박스 내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해당 상품이 시장 전체로 확대될 때 필요한 소비자보호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이터 기반 규제(Evidence-based Regulation)를 수행한다.

라. 시사점

글로벌 규제 동향이 시사하는 핵심은 포용보험 정책이 더 이상 '혁신이냐, 보호냐'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포용보험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넓은 사각지대를 포용할 때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소비자보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정책당국의 공통된 결론이다. 글로벌 규제 동향이 현대적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 금지에서 위험 기반의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기존의 사전적·형식적 규제에서 위험 기반의 사후적·실질적 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향후 정책당국 역시 포용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리스크가 낮은 포용보험에 대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대신 감독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신호를 포착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감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술 기반의 감독체계 구축과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규제 기술, 즉 섭테크

(Sup Tech)의 도입이다. 포용보험 사업자가 정부의 공공 데이터(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소득정보 등)를 활용하여 정교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복잡한 대면보고 없이도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감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민·관·휴먼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례들은 혁신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포용보험 생태계는 민간보험회사의 혁신 역량, 정부의 정책적 지원(세제혜택 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Agent Network)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당국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복지·디지털 부서가 참여하는 포용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칸막이 행정을 제거해야 한다.

4. 소결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초위험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거시적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보험의 이론적 당위성과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이행경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1절에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중위기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기후변화, 초고령화, 플랫폼 경제 확산 등이 서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증폭되는 초위험사회에서는 전통적 보험 메커니즘의 근간인 위험의 독립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업보험의 보장 공백이 단순한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 문명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어 2절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용보험의 가치를 포괄적·연결적·사회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재정립하였다. 포용보험은 단순한 사후적 금전 보상을 넘어 사전적 예방과 실물 돌봄서비스를 내재화함으로써 가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사회적 회복탄력성 제고 인프라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포용보험이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적 리스크관리 투자임을 학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론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원리를 탐색하였다. IAIS의 비례성 원칙과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사례 분석을 통해 혁신적 포용보험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전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위험 기반의 사후관리로 감독체계를 전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제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의 크기에 맞는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글로벌 정책 표준을 수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2장은 '위험인식(Why) → 가치 재정립(What) → 제도적 이행(How)'이라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3장에서 글로벌 포용보험 혁신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포용보험의 정책적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